

광주 학교들 출제 오류 심각...내신 불신 부른다

시험지 유출 고교 한 과목 4개 문항 오류 상식 밖...“재시험 봐야 할 수준” 학교측 “정답 표기만 잘못된 것”...시교육청 “내용 수정되면서 정답 정정” 최근 3년간 157개 중·고 재시험 674건...부실한 시험 관리체계 드러내

“한 과목에서 무려 4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재시험을 치러야 할 수준입니다.”

광주의 한 고교 교장은 이번 시험문답지 유출 과정에서 드러난 한 사립학교의 기말고사 출제 실태에 대해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험을 보던 중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정정했는데 (문답지를 빼돌린 학생이) 원래 답을 적었다”고 밝혔다. 생명과학 4개 문항의 내용이 수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답이 정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험문답지를 빼돌린 학생은 수정되기 전 답을 적어내 범죄가 틀똥나는 단서가 됐다. 실제 시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은 지구과학과 수

학Ⅱ 각 100점, 한국사 93점, 생명과학 86점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생명과학 4개 문항이 정정되지 않았다면 100점을 받았다.

광주 일선 고교에서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내신 성적에서 소수점을 다루는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고교의 특성상 상식밖”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광주 한 고교에서는 1문항 때문에 수학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른 사례도 있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학기에 전 과목을 통틀어 한 두 문항 오류가 나올 수 있으나 한 과목에서 4개 문항의 정답이 바뀌었다면 놀랄 일”이라며 “시험문제가 정정되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우 신중하게 문

항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험 문제 유출범죄가 발생한 학교의 내신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고교 교장은 “교사가 출제하면 문항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들끼리 교차검증을 하는데 이 과정이 충실히 이행됐는지 궁금하다”며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일탈이 문제지만 총체적으로 학교의 내신관리 체계는 물론 내부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주 고교의 시험출제 오류 등 성적 관리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교 내신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제 오류로 인해 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최근 3년간(2017~2019)간 157개 중·고교에서 674건의 재시험이 치러졌다.

90개 중학교 중 67곳(74%)이 190건, 67개 고등학교 중 62곳(92%)이 484건의 재시험을 치렀다. 광주지역 70~90%의 중·고교가 재시험을 치를 정도로 교사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얘기다. 2018년 한 해에만 한 중학교에서는 11건, 한 고등학교에서는 15건의 재시험이 있었다.

재시험 사유로는 출제 오류가 598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 진도 불균형 등 수업 범위 48건(7%), 감독 부주의 등 행정 실수 24건(3%) 순이었다.

한편, 시험 문답지 유출학교의 관계자는 출제 오류에 대해 “알려진 바와 달리 문제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정답 표기만 잘못 됐다. 교사가 애초 작성해 제출한 답안(문항정보표)에 정답 표기를 잘못해 수정한 것”이라며 “물론 이같은 일도 없어야겠지만 교사가 일을 서두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특정 문제의 정답이 1번인데 2번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태양광 연금’ 사기 사건 피해 노인 200명 넘어

농촌 노인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매월 ‘태양광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여 10% 상당의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끊긴 사건(광주일보 6월 23일자 6면)과 관련한 피해자가 한 달 사이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피해자가 최근 200명을 넘어섰다. 태양광 설비업체 대표 A(50대) 씨 등 일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해남을 비롯한 전남과 전국 농촌 마을을 무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돕겠다고 노인들에게 접근, 적게는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에 걸쳐 지난달 20일을 전후로 경찰이 집계한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 신고 금액은 70여 건, 20억원가량이었으나 피해 신고가 줄을 이으면서 피해 신고자는 200명을 넘어섰고 피해 신고 금액도 6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충남에 사무실을 둔 A 씨 등 일당이 텔레마케터와 영업사원을 두고 시골 노인들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 뒤 계약금만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골집 주변 공터, 건물 옥상, 텃밭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팔면 매월 수십~수백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복잡한 인허가부터 시설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준다는 말을 듣고 선뜻 거금을 내졌지만, 수개월을 기다려도 시공 조짐이 보이지 않자 고령의 피해자들이 앓다뒤편 경찰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A 씨 등 일당은 “정상적인 거래로 단지 시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시공 실적·보유 장비·시공 협력사 유무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해킹 당한 교사 여러 학년 담당...1.3학년 유출 가능성

시험지 유출 사건 남은 의문점은

추가 공범 여부도 배제 못해

영어만 유출 안된 이유 관심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의 초점을 추가 유출 피해와 공범 여부 등에 맞추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최근 2학년생 2명이 1학기 중간·

기말고사에서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수차례 시험지를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년의 시험지가 유출되거나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시험·답안을 유출당한 교사들 중 일부는 1학년, 3학년의 시험 문제도 출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일정 시간마다 화면을 캡처해 저장하는 악성코드를 교사들의 노트북에 심고, 시험지 출제

과정을 고스란히 사진 파일로 남겼다. 2학년 시험지뿐 아니라 1학년, 3학년 등 다른 학년의 시험지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영어 과목이 유일하게 유출되지 않은 이유도 미궁 속이다.

학생들은 중간고사에서 7과목, 기말고사에서 9과목을 유출했으며, 구체적으로 수학1·수학2·지구과학·한국사·독서·생명과학·한문·일본어·화학 등 답안을 빼돌렸다.

하지만 중간·기말고사 모두 영어 과목만큼은 답

안을 빼내지 못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출제용 노트북은 교내 캐비닛에 넣어두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등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학생 진술에 따르면 대부분 교사들은 노트북을 교무실 책상 위에 놓아둔 채 퇴근했다.

경찰은 영어 담당 교사가 노트북을 집 또는 캐비닛에 별도 보관했거나, 학생들의 해킹 공격을 무력화할 만큼 별도의 보안 시스템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정황을 조사 중이다. 또 학생들의 휴대전화·이동식 저장 장치(USB)·태블릿 PC, 교사들의 출제용 노트북 등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정황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교원인사위 결정에 교수 징계 안했는데... 조선대 이사회, 총장 징계 의결 ‘논란’

조선대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 학장들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사유로 민영돈 총장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책 연구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A 교수와 6학기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의 하지 않은 B 교수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두 교수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단과대 학장들에 대해 징계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교무처장)를 열어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단과대 학장들의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고 지시했지만, 민 총장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총장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 이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학교 규정을 어겼으며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교원인사위원회서 징계하지 않은 사안을 총장이 ‘직권으로’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해임했고, B 교수에 대한 징계 양형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찰직장협 “경찰국 철퇴” 시민 홍보

광주경찰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관계자들이 28일 광주송정역에서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는 시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